

기후변화협약과 우리 경제의 대응

채영배 · 현대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기후변화협약은 에너지 사용 규제를 통해 이산화탄소 등 온실 가스의 배출을 삭감하고자 하는 국제적 협약이다. 따라서 이 협약이 우리나라에 적용되는 경우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다행스럽게 현재 우리나라는 개도국 그룹에 속해 있어 의무적으로 온실 가스를 삭감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해 있다는 점과 장기적으로 여하한 형식으로는 개도국들도 온실 가스 삭감 의무에의 참여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금부터라도 의무 참여를 전제로 한 협상안 및 국내 대책을 마련토록 해야 할 것이다.

본 고에서는 기후 변화 협상의 최근 동향을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정리한 다음, 교토회의에서 이들 쟁점의 타결 전망 및 이러한 전망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파악하고자

머리말

오는 12월 일본 교토에서 열리는 기후 변화협약 제3차당사국총회를 앞두고 우리 언론들은 지면을 통해 높은 관심을 표시하고 있다. 관심의 초점은 기후 변화 협상의 주요 쟁점 및 이들의 타결 전망과 한국 관련 조항의 내용으로 모아지고 있다.

한다. 이어 이러한 기후변화협약의 경제적 영향을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 현황 및 전망과 관련해 간략하게 언급하며, 마지막으로 우리 경제의 대응 과제를 기후 변화 협상, 정부의 정책, 기업의 대응 등의 측면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기후변화협약 협상 동향

1) 협약 체결과 이후 동향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은 1992년 리오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세계 각국이 기후변화협약에 서명하고 협약이 체결됨으로써 본격화되었다. 同협약에서는 모든 국가의 온실 가스 배출 감소 노력을 촉구하고, 특히 선진 국가에 대해 2000년까지 온실 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으로 동결하도록 규정하였다. 同협약에는 현재 167 개국이 가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4년 3월에 가입하였다.

지금까지 1995년, 96년 두 차례에 걸친 당사국총회가 베를린과 제네바에서 개최되었으며, 오는 12월 교토에서 3차총회가 열릴 예정이다. 금번 교토총회의 가장 큰 이슈는 2000년 이후 추가 감축 일정을 결정토록 한 Berlin Mandate가 후속의정서 형태로 채택될 것인지의 여부이다. Berlin Mandate란 1995년 베를린의 제1차당사국총회에서 현재 감축 의무만으로는 지구 온난화 현상에 대처하기에 불충분함을 인

정해, 2000년 이후의 감축 의무에 관한 후속의정서를 1997년 제3차당사국총회에서 채택하도록 결정한 위임 조항을 말한다. 단, 2000년 이후 감축 목표는 부속서 I 국가(협약 채택 당시 24 개 OECD 회원국과 동구권 11 개국임)에만 적용된다.

2) 주요 쟁점

기후변화협약은 1992년 5월에 체결된 이후 1994년 3월에 발효되고, 현재 167 개국이 가입하고 있으며, 지구 환경 보호를 위한 대표적인 국제 협약이다. 따라서 모든 가입국들은 해수면 상승과 도서 국가의 침수, 생물 다양성 감소, 빈번한 기후 재해 발생 등 지구 온난화에 따른 피해에 대해 전지구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그러나 온실 가스 삭감을 위한 실천적 방안은 가입국간의 첨예한 이해 대립으로 국제적인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베를린회의 위임 사항인 후속의정서 채택을 위해 설치된 특별작업반인 AGBM은 제1차당사국총회 이후 현재까지 8차에 걸친 회의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AGBM은

독일의 본에서 열린 8차회의에서도 핵심 쟁점인 선진국의 온실 가스 삭감 목표와 온실 가스 삭감 의무에 개도국의 참여 문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였다. 따라서 교토총회에서 후속의정서 채택은 현재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다.

우선 선진국의 온실 가스 삭감 목표와 관련, EU는 2010년 온실 가스 배출량을 1990년에 비해 15% 삭감, 일본은 2008~2012년간 5% 삭감, 미국은 2008~2012년간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이 EU에 비해 소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은 화석 연료 의존도가 높고, 산업계의 반발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선진국의 온실 가스 삭감 문제에 있어, 최대 변수인 미국은 온실 가스 삭감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도를 선호하고, 온실 가스 삭감에 선진국과 함께 개도국의 참여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한편, 개도국의 온실 가스 삭감에의 참여 문제는 원래 1차당사국총회에서는 제외되었으나, 그 이후 미국, EU, 일본 등에서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선진국들은 온실 가스 삭감을 통한 지구 환경 보전을 위해서는 개도국들의 공동 참여가 불가피하다

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에 대해 개도국들은 지구 환경 파괴는 선진국 산업의 책임이라는 역사적 책임론을 강조하면서 당분간 삭감 계획에의 동참을 반대하고 있다. 아울러 개도국들은 현재 의정서 초안 제10조에 들어가 있는 “개도국들은 자발적으로 감축 계획에 참여토록 한다”는 조항은 무조건 삭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국, 멕시코, 터키 등 OECD에 가입한 선발개도국들은 선진국과 개도국들의 공방 속에서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다. 선진국들은 개도국들을 온실 가스 삭감 대열에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으로 특히 한국 등 선발개도국에 대한 참여 압력을 강화하고 있다. EU와 미국은 내년 부속서 개정시 삭감 의무가 부과되는 선진국 리스트에 상기 선발개도국들의 포함(물론, 기존 선진국과의 의무 차별을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 G-77과 중국 등 개도국들도 한국과 멕시코 등의 선진국 리스트 포함에 대해 반대하고 있지 않다.

이밖에도 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해서는 EU가 제기하고 있는 국별 의무 이행의 차등화 문제와 EU 국가내 공동 이행 문제와

미국이 제기하고 있는 배출권거래제도, 규제 대상 가스의 종류, 온실 가스 흡수 효과의 포함 여부 등 주요 쟁점이 남아 있다 (<표 1> 참조).

3) 교토회의 전망

여기서는 기후변화협약의 핵심 쟁점인 선진국들의 삭감 목표와 개도국들의 참여 문제를 중심으로 전망해보고 이러한 전망 하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전망해보고자 한다.

먼저 선진국의 삭감 목표를 보면 2010년경 삭감 목표에 있어 미국과 EU가 현격한 의견 차이를 보여 절충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미국과 EU에서 환경 논자들의 압력과 의장국인 일본의 중재 등을 감안할 때, 고위급에서 정치적 타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 즉, 2010년 온실 가스 삭감 목표와 관련, 1990년 대비 0%를 주장하는 미국과 15% 삭감을 주장하는 EU가 서로의 입장을 완화해 5% 삭감을 주장하는 일본안에 근접한 수준에서 합의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온실 가스 삭감 목표가 타결될 경우, EU가 요구하고

있는 역내 국가간 배출량 교환의 인정 문제, 미국이 제기하고 있는 배출권거래제도의 도입, 온실 가스 흡수 효과의 포함 문제 등 관련 의제의 타결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

한편, 개도국의 참여 문제를 보면 77그룹을 포함한 개도국들의 강력한 반발때문에 개도국의 삭감을 의무화하는 조항은 빠지는 대신, “개도국은 가스 삭감에 협력해야 한다”(개도국의 자발적 참여를 의미)는 표현을 삽입하는 선에서 타결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는 국제적인 온실 삭감 대열에 개도국의 참여를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 미국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개도국의 자발적 참여 문제는 이번 교토총회에서는 ‘교토 결의 사항’으로 정리되고 차기 총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선진국들 특히 미국은 쌍무협정을 통해 한국, 중국, 멕시코, 브라질,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주요 개도국에 대해 온실 가스를 삭감하도록 압력을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 참고로 교토회의의 의장국인 일본은 개발도상국의 온실 가스 감축 목표 연도를 2005년으로 설정하는 내용의 결의안 채택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

〈표 1〉 기후변화협약 주요 쟁점별 입장

	EU	JUSSCANZ(Non-EU OECD)	G-77 및 중국	한국
감축 목표	· 2005년까지 7.5% 감축 (1990년 기준) · 2010년까지 15% 감축	· 미국, 2008~2012년간 동결 · 일본, 2010년까지 5% 삭감	· 2020년까지 35% 감축 - 2010년 15% 삭감 - 2020년 20% 추가 삭감	
규제 대상 가스	· CO ₂ , CH ₄ , N ₂ O 3 개 온실 가스만	· 미국과 호주는 HFC, PFC, SF를 포함한 6 개 가스 · 일본은 CO ₂ , CH ₄ , N ₂ O 등 3 개	· CO ₂ , CH ₄ , N ₂ O 3 개만 (각 가스별로 감축 비율 적용)	· 6 개 가스 포함에 대해 검토중
총배출량 또는 순배출량 기준	-	· 일본: 총배출량 ·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순배출량	-	· sink에 의한 온실 가스 흡수 포함 여부 심층 분석 필요
감축 목표 차등화	· 단일 감축 비율 적용 주장 · EU 단일 감축 비율 적용 시 회원국간 감축 비율 차등화 허용	· 호주, 일본 적극 지지 · 미국 반대	· 반대	· 선호
정책 · 조치	· 이행의 강제성 정도에 따라 3 개 범주로 구분	· 미국, 호주, 일본, 각 당사국이 자유로이 메뉴 선택	· 정책 · 조치 이행시 개도국 피해 최소화 및 보상 체계 수립 요구	· 정책 · 조치 이행에 강제성 부여 반대
배출권거래 제도, Banking, Borrowing, Joint Implementation	· 긍정 평가 · Banking은 허용, Borrowing은 반대	· 적극 지지 · 미국, 일본은 Borrowing 포함해 적극 지지 ·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는 Borrowing에 일정 제한 필요성 지지	· 개념 미확립으로 반대 · 특히 JI에 따른 크레딧 배분 반대	· 긍정 평가 · 세부 사항 추가 분석 필요
Non Annex I 국가 부담	· 한국, 멕시코 등 신규 OECD 국가도 선진국의 무 부담	· 미국은 의정서의 evolution 규정에 2005년까지 모든 국가의 감축 공약 천명 촉구 · 일본은 more advanced developing countries의 자발적 의무 부담 촉구	· 적극 반대 · 의정서 초안 10조(개도국 자발적 참여 조항) 삭제 주장	· 개도국의 자발적 참여 지지
개도국에 대한 보상	· 반대	· 반대	· compensation fund, clean development found 설립 주장	· 반대

자료: 신장범(1997. 11. 4),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제 협상 동향 및 향후 전망", 기후변화협약의 협상 동향과 우리나라의 대응 방향 세미나 자료, p. 17.

로 알려지고 있다.

기후변화협약 협상과 관련, 우리나라의 입지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중간에서 매우 협소한 편이다. 우리나라는 OECD에 가입하고 있어 개도국 입장만을 고집하기 어렵고, 그렇다고 우리의 수용 능력을 무시하고 선진국 입장을 추종하기도 매우 곤란한 입장에 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면에서 전망해볼 수 있다.

첫째, 한국이 당분간 개도국 그룹에 속하는 경우이다. 이는 현재로서는 최선의 상황이기도 하나, 온실 가스 삭감에 자발적 참여가 궁극적으로는 의무적 참여로 연결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 자발적 참여 기간 중에도 미국과 EU 등 선진국들은 쌍무협정을 통해 온실 가스의 강제적 삭감을 한국 등 선발개도국에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온실 가스 삭감 의무에의 참여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식해, 의무 유예 기간 동안 온실 가스 저감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이다.

둘째, 한국이 선진국으로 분류되어 온실 가스 삭감 의무에 참여하는 경우이다. 한국의 온실 가스 삭감 문제와 관련, EU

는 한국 등 신규 OECD 가입국들을 아예 선진국 리스트에 올려놓자는 주장을 하고, 미국은 감축 의무 대상국을 기존의 선진 그룹에서 선발개도국 그룹으로 확대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당장 내년도에 있을 부속서 I 개정시, 선진국들은 온실 가스 삭감 의무에 우리나라가 참여하도록 온갖 압력을 행사할 것이다.

경제적 영향

1) 이산화탄소 배출 현황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율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표 2>에서 보듯이 1985~95년간 한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OECD 평균치에 비해 10배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일본의 2.5%에 비해서도 3 배 이상 높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이유는 경제 성장 속도가 매우 빨라 에너지 수요가 급증할 뿐 아니라, 에너지 효율성이 선진국에 비해 떨어지기 때문이다. 즉, 동일한 크기의 소득을 창출하는 데 있어 한국의 에너지 소비량이 선진국보다 훨씬

〈표 2〉 에너지 관련 지표의 국별 비교(1985~95년 평균)

(%)

	한국	일본	미국	OECD 평균
불변 GDP 성장률	8.9	3.0	2.5	2.5
1차 에너지 소비 증가율	10.3	2.8	1.8	1.8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	8.7	2.5	1.0	0.8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선진국들의 경우 경제 성장률이 에너지 소비 증가율을 밑도는 데 비해, 한국은 반대로 에너지 소비 증가율이 경제 성장률을 웃도는 데서 알 수 있다.

그리고 톤당 이산화탄소 배출 농도가 높은 석유, 석탄 등 화석 연료 의존도가 한국은 88%로 OECD 평균인 65%를 훨씬 웃도는 점도 이산화탄소 배출을 늘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 가스 삭감 능력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 구조와 저에너지 가격 등 구조적

특징때문에 에너지 절약이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은 70년대부터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1차 금속, 석유화학 등 중화학 공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선진국들에 비해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정부는 80년대 이후 국제 에너지 가격의 안정을 바탕으로 물가 안정과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에너지 가격을 계속 인하하는 저에너지 가격을 유지해왔다. 실제로 경유, 벙커C유, 전력, 도시 가스 등 에너지의 실질 가격은 1985년을 100으로 했을 때 1995년에는 30 내지 48 수준에 지

〈표 3〉 에너지 가격의 국제 비교(1997)

	한국	일본	미국	프랑스	독일	
휘발유	100	100.3	36.5	121.6	n.a	
경유	100	185.8	94.7	212.1	n.a	
LNG	100	447.9	n.a	162.8	165.0	
전력	가정용	100	238.0	69.7	90.9	119.7
	산업용	100	230.0	84.0	167.0	116.0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나지 않은 실정이다.

국제적으로도 국내 에너지 가격은 미국을 제외하고는 일본이나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국별로는 일본에 비해 에너지 가격이 매우 낮은 편이고, 에너지원별로는 LNG 가격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저에너지 가격은 차량 증가 및 차량의 대형화, 경제성 저하에 따른 에너지 절약 투자의 위축 등을 통해 에너지 소비를 부추기는 역할을 하였다.

2) 이산화탄소 배출 전망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현재의 경제 성장 추세가 지속되는 경우 우리나라의 1차 에너지 수요는 2010년까지 연평균

5.9%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낼 것이다. 따라서 에너지 소비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1990년 기준으로 2000년에는 2.2~2.3 배, 2010년에는 3.3~3.5 배로 급증할 전망이다.

다시 말해서, 현재의 성장 추세가 지속되고, 현행의 에너지 절약 정책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온실가스 배출 대국이 된다는 것이다. 가령, 이산화탄소 배출 규모로 볼 때 한국은 1990년 세계 16위에서 2000년 9위로 진입하고 2010년에는 6위, 2030년에는 미국 다음으로 2위를 기록하고,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2010년 연 4 톤을 초과해 미국 5.4 톤, 캐나다 4.5 톤, 호주 4.4 톤에 이어 4위를 기록할 전망이다.

한편, 선진국들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미증 내지는 감소 추세를 보여 우리와는

〈표 4〉 한국의 에너지 수요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 전망

	1990	2000	2010	2020
1차 에너지 (백만 TOE)	93.2	210.4	328.1	434.3
이산화탄소 배출량 (백만 톤)	65.2	148.5	217.0	281.2
1인당 이산화탄소	1.52	3.17	4.37	5.56

자료: 임육기, "국제 온실 가스 규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 상기 세미나 자료, p. 31.

대조적이다. <표 5>에서 보듯이, 1990~2000년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두 자리수 증가를 보인 국가는 호주와 스페인에 불과하며, 증가율도 16%와 24%로 한국의 128%에 비해서는 1/5 내지 1/8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그외의 선진국들은 독일의 25% 감소를 비롯, 대부분 국가들이 감소 내지는 5% 미만의 증가를 기록하고 있을 뿐이다.

3) 경제적 영향

에너지 절약의 대표적인 수단으로 거론되는 탄소세는 에너지원별 탄소 함유량을 기준으로 일정 세금을 부과해 에너지 가격을 높임으로써, 에너지 소비와 이에 따른 이산화탄소 등 온실 가스의 배출량을 줄이는데 기여한다. 다시 말해, 탄소세의 도입은 1차적으로는 에너지 소비 절감을 통해, 2차적으로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제품의 소

비 절감을 통해 국민 경제의 생산 규모를 줄이는 효과를 가진다.

이러한 탄소세의 국민 경제적 영향은 에너지가격체계와 에너지 의존도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예컨대, 에너지 가격이 낮을수록 탄소세 도입에 의한 에너지 가격 상승률이 커지게 되고, 따라서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에너지 소비의 감소 효과는 커지게 된다. 또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산업 구조일수록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상승 효과가 커지게 되기 때문에, 이들 에너지 사용 제품의 소비 감소 효과도 커지게 된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의 경우 앞에서 본 것처럼 선진국에 비해 에너지 가격이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 다소비형의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동일한 세율의 탄소세가 도입되는 경우 우리나라의 소비·생산 감소 효과는 선진국에 비해 매우 클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그리고 산업

<표 5> 주요 선진국들의 이산화탄소 배출 증감량(1990~2000년간 총증가율)

(%)

미국	일본	독일	호주	스페인	스위스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한국
3.0	2.3	△25	16.3	24.1	△3.5	△3.7	△7.9	4.1	128

자료: 임육기, 상기 논문, p. 31.

별로는 석탄과 석유 등 수입 연료에 거의 의존하고 있는 에너지 산업의 타격이 가장 크고, 이어 에너지 다소비 산업인 석유화학, 1차 금속, 시멘트 등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선진국들은 경제 성장과 에너지 소비가 이미 안정화 단계에 있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90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이 그다지 무리한 것은 아니다(〈표 5〉 참조). 반면, 한국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경제 성장 지속으로 에너지 수요 또한 높은 증가를 보일 전망이다. 따라서 선진국과 동일한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경우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가령, 선진국과 동일하게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90년 수준(6,520만 톤)으로 동결하는 경우, 2000년 배출량은 1억 4,850만 톤에서 8,330만 톤을 줄여야 한다. 다시 말해, 2000년 경제 활동의 절반 이상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포철경영연구소는 우리나라에 선진국과 동일한 온실가스 삭감 의무가 적용될 경우, 국내 GNP 성장률은 5~7% 가량 하락해, 제로 성장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한다.

요컨대, 이산화탄소 배출 삭감 기준 연

도를 1990년으로 하는 현재 선진국들의 의무 조항은 우리 경제 현실에서는 수용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대응 과제

첫째, 기후 변화 협상과 관련된 과제가 있다. 우리 경제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 경제 성장 지속으로 에너지 소비 확대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에너지 소비 동결과 제로 경제 성장을 의미하는 선진국의 의무 조항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러한 선진국 의무 조항이 면제되는 개도국 그룹에 속하는 것이 최선의 방도이다.

그러나 개도국의 자발적인 참여 조항은 장래 의무적 참여 조항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 쌍무 협상을 통한 의무 참여 강제, 한국 등 신규 OECD 가입국에 대한 의무 참여 압력의 가중 등 주변 여건을 고려할 때, 개도국들의 의무 분담은 중장기적으로는 불가피한 추세이기도 하다. 따라서 의무 부담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선진국과는 차별화되고 우리 수준에 맞는 의무를 부담하도록 치밀한 협상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참고로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의무 부담에 참여하는 협상안으로 기준 연도와 목표 연도를 각기 10년씩 연기해 2010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00년 수준보다 32% 삭감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에너지 부문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 과제가 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을 위해서는 그 결정 요인인 경제 성장률, 에너지 소비 증가율, 화석 연료 의존도 등 세 요인 가운데서 에너지 정책 당국이 조정할 수 있는 에너지 소비 증가율과 화석 연료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에너지 소비 증가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에너지 소비 절약 및 효율 향상이 필요하다. 에너지 사용 자체를 줄이기 위해서는 에너지 가격을 현실화함으로써 소비 절약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에너지 사용 기기의 효율 향상을 위해서는 복잡다기한 에너지 효율 관련 제도 및 법규의 정비, 최저 에너지 효율 기준의 강화 및 품목 확대, 고효율 제품의 구매 유도를 위한 에너지비용표시제도 등 제도 개선이 요망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 구조가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 중심으로 되어 있어 에너지 절약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산업 구조적

인 측면에서 에너지 효율성 향상을 위한 산업 구조 조정 대책이 산업 정책과 에너지 정책의 연계를 통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화석 연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연료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연료 사용을 늘려가야 할 것이다. 이산화탄소가 거의 배출되지 않는 연료로는 태양열, 조력, 풍력, 지열 등 재생 에너지와 원자력이 있고, 화석 연료 가운데서는 LPG 등 천연 가스가 이산화탄소 배출 계수가 낮다.

셋째, 기업들의 대응 과제가 있다. 정부는 1998년부터 에너지가격예시제를 도입, 2000년까지 에너지 가격을 현실화시킬 계획이다. 따라서 고에너지가격시대로의 진입이 눈앞에 다가왔고, 이러한 고에너지 가격 경향은 온실 가스 삭감을 위한 탄소세 도입이 전세계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더욱 분명해질 것이다. 이러한 고에너지가격 시대에서 에너지 효율성 제고와 에너지 비용의 절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부터 착실하게 에너지 절약을 추진하는 기업만이 미래의 고에너지가격시대에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